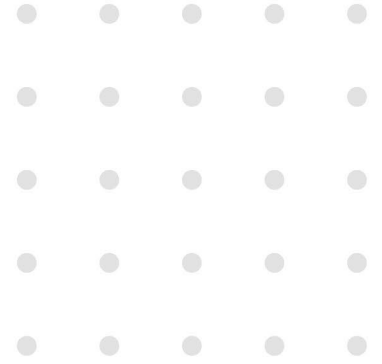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Alternative Issue Paper

No.20 | 2020.09.0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이해하기: 배경, 설계, 결과, 평가

이건민 상임연구원

✉ paulygm2@snu.ac.kr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이해하기: 배경, 설계, 결과, 평가¹⁾

핀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의 최종 결과는 지난 5월 6일에 발표되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2월 8일에 예비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Alternative Issue Paper No. 20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과 설계 및 실험 결과를 요약하고, 이 실험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한다.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2015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중도우파 연립정부 주도 하에 급속도로 추진되었으며,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의지와 목표, 그리고 여러 제약요소로 인하여 표본 모집단, 식별하고자 한 핵심적인 정책 목표·효과, 실험기간 등의 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귀결되었음
- 핀란드 실험은 전국 단위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채택한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으나, 표본 모집단 및 핵심 정책 목표·효과에서의 제한점, 비교적 짧은 실험기간, 노동소득, 조세 및 복지급여와 기본소득의 상호작용에 관한 처리, 실험 중반에 도입된 활성화 모델 등에서 다양한 한계를 동시에 보여줌
- 몇 가지 해석상의 주의가 요청되기는 하지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태도 효과와 2차년도의 고용 또는 노동의욕 증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실험의 설계, 행정부서 간 긴밀한 협력, 설계와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연구팀의 구성 등이 정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실험 초기에 발생하는 대중적인 정책적, 정치적 관심을 그들의 이점이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 기본소득 실험의 근본적인 한계, 기본소득 실험의 유용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함

1) 이 글의 일부 내용은 미디어 데모스(2020. 5. 26),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20. 6. 18), 류중희(2020)에서 소개된 바 있다. 아울러 1절과 2절의 구성과 내용은 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2019)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1. 배경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추진 과정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016년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와 그에 앞선 2015년의 대대적인 캠페인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도 영향을 미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015년 선거를 통해 들어선 유하 시필래(Juha Sipilä)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립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하기로 결정함
 - 2016년 핀란드 사회보험청 Kela의 올리 캥가스(Olli Kangas)가 총괄책임을 맡은 연구 컨소시엄이 여러 실험 설계안들의 개요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간함(Kangas and Pulkka, 2016)
 - 2016년 12월 핀란드 의회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는 것에 관한 법안을 승인함(Finlex 2016/1528)

-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시기에 따라 용어와 정책적 초점이 달라짐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2015년 집권한 연립정부에서 단기간에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었지만, 사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감(Halmetoja et al., 2018; Ikkala, 2012; Koistinen and Perkiö, 2014; Perkiö, 2020)
 -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는 시민임금(Citizen's Wage),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보장최소소득(Guaranteed Minimum Income)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본소득(Basic Income; perustulo)이 주로 사용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이러한 용법의 변화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기본소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의 변화를 반영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들의 간소화, 최소생계수준의 보장과 사회권의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커버리지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춤(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이 초래하는 관료주의적 제재와 통제, 인센티브 뒷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의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받았음 (Halmetoja et al., 2018; Perkiö, 2020)
- 핀란드가 스웨덴 등의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장기실업 문제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이러한 변화의 한 배경을 이룸(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1990년대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1990년 3.4%에서 1993년 17.7%로 급증함 (Ploug, 1999: 82)
 - 2018년경에도 실업률은 7.2%에 달함(Statistics Finland, 2018)
- 2008년 세계경제위기는 실업급여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영향을 미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목표는 새로운 형태의 활성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보고자 한 것이었음
 - 즉 “사회보장제도를 노동의 성격 변화에 맞추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더 큰 노동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는 방법을 식별하기” 위함(Kangas and Pulkka, 2016: 4)
 - 기본소득을 관료주의와 빈곤의 덫을 줄이면서도 일할 유인을 제고하는 실용적인 정책으로 바라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반면 2010년대 전 세계 기본소득 논쟁의 주요 배경인 디지털 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자동화나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추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실험을 둘러싼 논쟁에서 각 정당들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발견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 기본소득 논쟁의 핵심에는 정당들이 자리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1970년대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정당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인 정당으로는 중앙당(Centre Party), 녹색동맹(Green League), 젊은 핀란드인당(Young Finns), 좌파동맹(Left Alliance) 등이 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 기본소득은 확고하게 정책무대에 진입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007년 녹색동맹은 부분기본소득 모델을 정당 플랫폼의 일부로 도입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011년 좌파동맹은 독자적인 누진적 부분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부분기본소득 모델과 완전기본소득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소득재분배 효과 계산을 위해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기법이 활용된 점, 요구되는 세제개혁의 종류를 명확히 한 점 등이 이전 시기의 논쟁들과 구분되는 점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이를 통해 기본소득은 단지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정책대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부분기본소득 제안들이 정치적 토론에서 지배적이었으며, 충분기본소득과 같은 더욱 관대한 기본소득 모델들은 주변화되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중앙당과 같은 주요 정당이 비록 약하긴 하지만 일관되게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다른 유럽국가들과 구분되는 지점이며, 이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가능케 한 주요 배경 중 하나를 이룸(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주요 행위자는 바로 중앙당 지도자이자 당시 총리였던 유하 시필라이며(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유하 시필라이는 2012년에 이미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에 주목한 바 있음(Sipilä, 2012)
-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와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지지는 엄연히 구분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좌파인 사민당과 우파인 국민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은 기본소득을 일관되게 반대했으며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Perkiö, 2020; Stirton et al., 2017)

- 중앙당과 함께 우파 연합정당을 이룬 핀인당(Finns Party, 지금은 청색미래당(Blue Reform))과 국민연합당은 기본소득에 부정적이었지만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고용 활성화에 주된 초점을 맞춘 보수적인 형태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기본소득 실험을 용인할 수 있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Perkiö, 2020; Stirton et al., 2017)
-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지해온 녹색동맹과 좌파동맹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학생들과 25세 미만 사람들을 배제하고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실험 설계 때문이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여러 정당들이 실험의 설계 파라미터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결국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사회정책에서 사회실험의 중요성에 관한 핀란드 내에서의 지지 확산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의 싱크탱크인 데모스 헬싱키(Demos Helsinki)와 탱크(Täнк)의 영향력이 컸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데모스 헬싱키는 사회정책에서 사회실험의 문화를 촉진시킨 중요 행위자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탱크는 한 보고서를 통해 실험의 참가자들을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뽑는다는 것, 실험 참가자들로 선정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안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탱크의 보고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급여 수준을 포함하는 음의 소득세 실험을 제안했다는 점,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인 노동연령층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 요소와는 차이가 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2. 설계

2.1. 결정 과정

- 올리 캥가스 교수가 총괄책임을 맡은 연구 컨소시엄에서 2015년과 2016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설계를 연구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유종성, 2019. 2. 25)
- 2015년 가을 총리실에서 기본소득 실험 설계 연구를 공모하였으며, 핀란드 사회보험청 (KELA)이 주도하는 연구 컨소시엄이 이를 담당하기로 결정됨(유종성, 2019. 2. 25)
-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을 위해 총 2,000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됨(유종성, 2019. 2. 25)
- 연구 컨소시엄은 부분기본소득, 완전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참여소득과 같은 네 개의 서로 다른 옵션들을 제시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016년 3월 30일에 출간된 예비보고서에서는 야심찬 연구 설계를 위한 권고들이 소개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016년 12월에 발간된 최종보고서에서는 다음 단계에서 실험을 더욱 확장시킬 방법에 관한 권고들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들을 감안하여 2017년 1월에 개시될 실험을 위한 더욱 제한적인 제도를 제시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기본소득 실험법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nd Health Affairs)에 의해 작성되었고, 2016년 8월에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자 여러 연구소, 노동조합에 발송되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전문가 집단 외부의 정치 행위자들이 연구 설계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림(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헌법위원회는 기본소득 실험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기본소득 실험법안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서로 다른 정책처치를 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핀란드 헌법의 평등조항(Equality Clause)을 위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Law Committee)가 연구 설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헌법위원회는 기본소득 실험으로 인하여 누구도 경제적으로 열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본소득 실험 설계를 수용함(Kalliomaa-Puha et al., 2016)
- 몇몇 의회위원회에서의 전문가 공청회, 의회에서의 두 번의 짧은 토론 후에, 법안은 핀란드 국회의원 200명 중 170명의 찬성으로 2016년 12월 20일에 통과됨(Kalliomaa-Puha et al., 2016)
- 실험 개시 후 주요 과정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실험은 2017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여러 학술 파트너들과 함께, Kela의 연구부서에서 실험 결과에 대해 평가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예비 결과 발표는 2019년 2월 8일, 최종 결과 발표는 2020년 5월 6일에 이루어짐
 - 법안의 초안(draft bill)은 2018년에 기본소득 실험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했지만, 현재의 법률은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았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018년 중반에 사회보건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2.2. 설계 파라미터

- 핀란드 실험을 이해하기 위한 네 개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첫째, 핀란드 실험은 전국 단위로 무작위 통제 실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채택한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실험집단은 전국에서의 인구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지는 않았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뽑는다는 것(Randomization)이 핵심임
 - 양 집단을 최대한 유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개입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고자 하는 것임
 - Randomization이 잘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양 집단에서의 성과변수(Outcomes)의 차이를 정책개입의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실험 중반부인 2018년 1월에 도입된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은 실험 환경을 흐트러뜨리고 실험 결과 해석을 복잡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재통합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실업자가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지 않는 것(non-compliance)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의 4.65%를 삭감하는 정책을 실시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실험 기간 도중에 활성화 모델의 도입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고용 또는 노동의욕 증진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졌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현실적, 정치적 고려와 예산에 대한 고려는 최선의 연구 설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연구 컨소시엄에서는 전국 단위의 무작위 통제 실험(RCT)과 특정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실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포화장소(saturation site)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연구 설계를 주장했지만, 예산 문제와 현실적, 정치적 고려로 인하여 채택되지 않았음(유종성, 2019. 2. 25; 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표본 모집단(sample population)은 핀란드의 전체 실업자가 아니라 Kela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실업자들, 즉 기초실업보장(basic unemployment security) 대상자들로 국한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의 실업자들은 소득비례(earnings-related)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제도는 주로 노동조합에 의해 운영됨)과 기초실업보장을 받는 사람들로 구분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기초실업보장을 받는 실업자들은 다시 기본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과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로 세분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기초실업보장을 받는 실업자들의 수는 약 24만명이었으며, 이 중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수가 198,954명, 기초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가 36,910명이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기초실업보장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수급액은 약 월 560유로(월 696.6유로에서 20%의 원천징수 세금을 제한 액수)로, 2017년 기준으로 평균 약 월 1,371유로를 받은 소득비례 실업급여 대상자(전체 실업자의 44%를 차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유종성, 2019. 2. 25; Kela, 2018)
 - 25~58세로 연령을 제한하긴 했지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표본 모집단은 전국에 걸쳐 기초실업보장을 받는 실업자들을 상당히 대표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표본 모집단을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관대한 실업급여를 받는 소득비례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둘째, 지역 실험이 아니라 전국 단위 무작위 통제 실험(RCD) 설계였음에도, 핀란드의 실험설계는 특정한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에만 집중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목표 모집단은 2016년 12월 1일 기준으로 25~58세이며 2016년 11월 기준으로 Kela에 의해 운영되는 기초실업보장을 받는 사람들임(Kela, 2017)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모두 합하면 17만 5,222명인데, 그 중에서 2,000명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험집단으로 무작위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17만 3,222명은 자동적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함(Kangas, Jauhainen, Simanainen and Ylikännö, 2019)
 - 행정데이터와의 비교를 위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될 5,000명이 통제집단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전 세계 다른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과는 달리,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실험의 참여가 강제됨(유종성, 2019. 2. 25; Kangas and Pulkka, 2016; Kangas et al. 2017)
 - 기본소득이 (장기)실업자들의 노동시장 관련 행동과 태도에 미칠 영향을 보고자 한 핀란드 정부의 목표, 그리고 2017년 1월에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핀란드 정부의 계획

은 목표 모집단을 확장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요인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연구팀은 25~63세 저소득층으로 실험 모집단을 삼을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유종성, 2019. 2. 25)
-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5세 미만 실업자들, 저소득 가구들, 자영업자들, 학생들은 실험에서 배제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장기)실업자들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더 큰 관료제의 덩, 빈곤의 덩, 실업의 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행동과 태도에서의 반응이 더 클 것으로 가정되었으며, 노동공급의 탄력성 역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클 것으로 기대되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셋째, 기본소득 지급 수준, 그리고 기본소득이 노동소득, 조세 및 복지급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연구 컨소시엄은 복수의 기본소득 지급 수준을 포함하는 실험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월 560유로의 부분기본소득 모델만을 실험하기로 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월 560유로는 기초실업보장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액수에 상응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복수의 기본소득 지급 수준을 포함하는 실험은 헌법상 평등권에 저촉될 위험으로 인하여 채택되지 않음(유종성, 2019. 2. 25)
- 기본소득 수령자들 역시 수급자격 조사를 통과할 경우 사회부조, 주거급여 등의 기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017년 11월 기준으로, 실험 모집단의 1/3이 약간 넘는 사람들이 사회부조를 받고 있었다고 추정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이는 실험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기존의 복지급여들을 계속 받기 위하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Kangas, Jauhiainen, Simanainen and Ylikännö, 2019)
 - 이는 사회부조를 비롯한 기존 복지급여에 대한 현재의 의존성 자체로 말미암아, 무조건

적인 (게다가 충분한 액수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행동과 태도 면에서의 변화가 적어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는 잘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see Kangas, Jauhiainen, Simanainen and Ylikännö, 2019: Table 2)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설계에서 기본소득은 유급노동을 비롯한 다른 소득원천 위에 더해지며(top-up), 이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빈곤의 덫과 실업의 덫을 줄인다는 것을 함의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실험의 핵심목표는 부분기본소득을 받는 실험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기존의 기초실업보장을 받는 통제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식별하는 것이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물론 위에서 지적한 기본소득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상호작용 문제, 그리고 현 제도 하에서 사람들이 복지급여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무조건적인 (게다가 충분한 액수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고용 또는 노동의욕 증진 효과가 적어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는 잘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
 - 무조건적인 (게다가 충분한 액수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행동과 태도 면에서의 변화가 적어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는 잘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see Kangas, Jauhiainen, Simanainen and Ylikännö, 2019: Table 2)
- 실험집단에 속한 2,000명에 대한 세금 처리는 곤란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낳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실험집단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이는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모델 또는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높은 세율에 직면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하지만 실험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현존 세제에서의 세율이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기로 하였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이는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더 낮은 참가세율(한 사람의 총소득(gross income)이 일정 정도 증가할 경우, 총소득 증가분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액, 복지급

여 감소액을 모두 고려했을 때 줄어들게 된 소득의 비율)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함의함 (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2,000명의 세금을 별도로 조정하여 취급하는 것은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 국세청은 6개월 동안 특별세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로 인해 실험집단 역시 기존의 세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됨(유종성, 2019. 2. 25)
- 재무부, 국세청, 사회보장부 사이의 정치적 협조의 부재는 실험집단에 속한 2,000명의 세금을 별도로 조정하여 취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요소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넷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기간이 2년이라는 점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이 대개 3~4년을 실험기간으로 삼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기간은 짧은 편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2년이라는 기간은 행동과 태도 면에서 중요한 변화들을 낳지 않을 것으로 보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실제 항구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이 2년 후에 실험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도 식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칠 것임(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물론 실업의 덩어리, 빈곤의 덩어리 등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비록 단기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정신적, 육체적 건강 및 웰빙의 증진, 스트레스의 감소 등은 단기 실험의 경우에서도 잘 발견됨(Forget 2011; 2013)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201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2018년 12월 31일에 마치기로 한

것은 2019년에 있을 다음 선거 전에 실험을 완료하고자 한 중도우파 연립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실험 기간 도중에 실험을 확장하거나 실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정치적으로 무시되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3. 결과

3.1. 2019년 2월 8일에 발표된 예비 결과²⁾ (Kangas, Jauhiainen, Simanainen and Ylikännö, 2019)

□ 고용 또는 노동의욕 증진 효과

- 기본소득 실험의 고용 효과는 실험 1년차의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됨
-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년 동안의 평균 고용일은 실험집단의 경우 49.64일, 통제집단의 경우 49.25일이었음
 -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실험집단의 경우 43.70%, 통제집단의 경우 42.85%였음
 - 근로소득과 자영업 소득의 합계 액수 평균은 실험집단의 경우 4,230유로, 통제집단의 경우 4,251유로였음
 -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태도 효과

- 설문조사 응답률은 실험집단의 경우 31.35%, 통제집단의 경우 20.29%, 전체 응답률은 23.23%인 것으로 나타남(Table 1)

2) Kangas, Jauhiainen, Simanainen and Ylikännö(2019)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기본소득 실험이 웰빙 등에 미치는 효과는 실험 종료 직전에 실시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됨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여러 차원의 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Table 5)
 - 타인에 대한 신뢰: 실험집단의 평균은 6.68점, 통제집단의 평균은 6.30이었음(유의확률 0.0030)
 -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실험집단의 평균은 6.62점, 통제집단의 평균은 6.30이었음(유의확률 0.0183)
 - 정치인에 대한 신뢰: 실험집단의 평균은 4.28점, 통제집단의 평균은 3.80이었음(유의확률 0.0007)
 - 세 변수 모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여러 차원의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남(Table 6)
 -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상당히 강함’ 또는 ‘강함’으로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58.2%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46.2%였음(유의확률 0.0001 미만)
 - 스스로의 재정상황에 대한 자신감: ‘상당히 강함’ 또는 ‘강함’으로 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42.2%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30.3%였음(유의확률 0.0001 미만)
 -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칠 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당히 강함’ 또는 ‘강함’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28.9%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22.6%였음(유의확률 0.0001 미만)
 -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스스로의 재정상황에 대한 자신감,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칠 능력에 대한 자신감 모두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스스로 인식한 건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남(Table 7)
 -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55.4%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46.2%였음(유의확률 0.0073)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스스로 인식한 집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조사됨(Table 8)

-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66.7%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55.7%였음(유의확률 0.0001)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스스로 인식한 집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조사됨(Table 9)
 - 지난 1년 동안, 이전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흥미를 잃은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 실험집단은 24.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통제집단은 33.8%가 ‘그렇다’라고 응답함(유의확률 0.0003)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노동의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Table 10)
 - 현재 전일제와 시간제 중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양 집단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설문한 것으로, 실험집단의 경우 38.0%가 현재 시간제로, 62.0%가 전일제로 일하고 있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30.3%가 현재 시간제로, 69.7%가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답함(유의확률 0.0870)
 - 현재 시간제 종사자들 중에서 시간제 대신 전일제로 일할 의향이 있는지: 현재 시간제 종사자들 중에서 시간제 대신 전일제로 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실험집단은 68.6%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 통제집단은 58.2%가 ‘그렇다’라고 대답함(유의확률 0.1931)
 - 시간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경우, 표본 수가 적어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비결과에서의 이러한 보고는 기본소득이 수령자들의 노동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유종성, 2019. 2. 25)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취업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Table 11)
 - 향후 1년 내에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실험집단은 56.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통제집단은 44.8%가 ‘그렇다’라고 응답함(유의확률 0.0001 미만)
 - 예비결과에서의 이러한 보고는 기본소득이 수령자들의 노동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유종성, 2019. 2. 25)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가계수지를 맞추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Table 12)

- 현재 수준의 가구소득에서 스스로 인식한 가구의 재정적 웰빙: ‘안락하게 생활한다’ 또는 ‘괜찮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60.0%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50.9%였음(유의확률 0.0002)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스스로 인식한 스트레스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Table 13)
 - ‘전혀 없다’ 또는 ‘단지 약간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54.8%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45.6%였음(유의확률 0.0005)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료주의에 덜 시달렸으며 기본소득의 관료주의 감소 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드러남(Table 14)
 - 사회보장 복지급여를 청구할 때 수반되는 관료주의에 대한 의견: 지난 2년 동안, 사회보장 복지급여를 청구할 때 너무나 많은 관료주의가 존재한다고 느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험집단은 약 58.9%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통제집단은 약 6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함(유의확률 0.0009)
 - 기본소득의 관료주의 감소 효과에 대한 의견: 기본소득이 일자리 제안을 수용할 때 수반되는 관료주의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하게 동의한다’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81.3%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72.4%였음(유의확률 0.0001 미만)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본소득의 효과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Table 15)
 - 기본소득이 일자리 제안 수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입장: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일자리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이치에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하게 동의한다’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89.0%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76.1%였음(유의확률 0.0001 미만)
 - 기본소득이 개인 사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입장: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자신의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하게 동의한다’ 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72.2%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63.2%였음(유의확률 0.0001 미만)
 -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 기본소득이 핀란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영구적 부분으로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하게 동의한다’ 또

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약 84.8%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약 75.3%였음(유의확률 0.0001 미만)

3.2. 2019년 4월 4일에 발표된 예비 결과에 대한 추가 발표³⁾ (이건민, 2019)

- 기본소득은 노동시장 참가 시 적용되는 세율을 뜻하는 참가세율(participation tax rates)을 평균적으로 약 12~23%p 감소시킴

- 기본소득은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0을 ‘타인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0을 ‘타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실험집단의 평균은 6.8, 통제집단의 평균은 6.3으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유의확률 0.003)
 - 젠더, 연령, 소득, 교육, 건강, 거주지 등을 통제했을 때의 유의확률도 0.015로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기본소득은 정치 신뢰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 정당에 대한 신뢰 변수, 정치인에 대한 신뢰 변수, 의회에 대한 신뢰 변수를 바탕으로 하나의 요약변수를 구성함
 - 0을 ‘정치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0을 ‘정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실험집단의 평균은 4.5, 통제집단의 평균은 4.0으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정치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남(유의확률 0.002)
 - 젠더, 연령, 소득, 교육, 건강, 거주지 등을 통제했을 때의 유의확률도 0.007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기본소득은 사법기구 신뢰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여러 변수를

3) 발표문들의 슬라이드 자료는 아래의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https://www.slideshare.net/tag/perustulokokeilu?utm_source=uutiskirje&utm_medium=email&utm_campaign=Experimental+stdudy+on+a+basic+income+2018. 이건민(2019)은 여러 발표문들의 슬라이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통제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trust in justice system) 변수와 경찰에 대한 신뢰(trust in police) 변수를 토대로 하나의 요약변수를 만들었음
- 0을 ‘사법기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0을 ‘사법기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실험집단의 평균은 7.2, 통제집단의 평균은 6.9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사법기구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유의확률 0.031)
- 하지만 젠더, 연령, 소득, 교육, 건강, 거주지 등을 통제했을 때의 유의확률은 0.166으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기본소득은 자신감과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조사됨

- 미래에 대한 자신감 변수, 재정상황에 대한 자신감 변수,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미칠 능력 변수를 종합하여 하나의 요약변수를 구성함
- 1을 ‘자신감이 전혀 없음’, 5를 ‘완전한 자신감’이라고 했을 때, 실험집단의 평균은 3.2, 통제집단의 평균은 2.9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자신감과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남(유의확률 0.000)
- 젠더, 연령, 소득, 교육, 건강, 거주지 등을 통제했을 때의 유의확률도 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석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낮은 응답률
 - 하지만 전형적인 설문조사 응답률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가능성
 -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사람들이(특히나 실험집단 내에서) 설문조사에 더 많이 임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일단 관측된 배경 특성들에서는 주요한 차이들이 발견되지 않았음
- 주관적 측정이 갖는 문제점
 -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견해에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음
 - 하지만 개인의 웰빙을 평가할 때에는 주관적 측정이 중요하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함

3.3. 2020년 5월 6일에 발표된 최종 결과⁴⁾

□ 2차년도(2017년 11월~2018년 10월)의 고용 또는 노동의욕 증진 효과

- 기본소득 수령자들의 고용률은 이 기간 동안 통제집단에 비해 약간 더 개선되었음
 - 실험집단은 평균 78일간, 통제집단은 평균 73일간 고용되었으며, 기본소득은 고용일을 6일가량 증가시켰음
 - 기본소득은 다양한 집단들에게 약간 상이한 효과들을 가져온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기본소득 수령 가족들의 경우에는 실험의 두 해 모두 고용률이 개선됨
 - 다양한 집단들의 결과는 관측치는 적으면서 테스트(측정한 성과변수들의 수)는 많아서 여전히 확정적이지 않음
 -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최근 이민자들로 구성된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이외의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이에 대응하는 통제집단보다 평균 13일 더 많이 일한 것으로 나타남(Van Parijs, 2020. 5. 7)
 - 또한 자산조사 기반 주거급여가 덜 빈번하고 그로 인해 남아 있는 실업의 텃이 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 지자체의 경우,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이에 대응하는 통제집단보다 평균 7.8일 더 많이 일한 것으로 분석됨(Van Parijs, 2020. 5. 7)
- 실험의 고용효과들은 2018년 1월 활성화 모델(실업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삭감하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졌음
 - 활성화 모델 때문에 양 집단에서 비대칭적으로 실업급여의 자격기준이 더 엄격해졌음

4) Kela(2020. 5. 6)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4. 평가

4.1.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 핀란드 실험은 고용 혹은 노동의욕 증진 효과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또한 장기실업자라는 일부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한 “제한된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음
- 핀란드 실험은 “실업자만을 실험 대상으로 한 점에서 보편성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본소득 실험’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대신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의 급여 수급에 따르는 조건(의무)은 없기 때문에 이 실험의 정확한 성격은 ‘무조건적 실업급여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존재함(정원호, 2020. 5. 12)

4.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고용 혹은 노동의욕 증진 효과에 관한 해석
 - 고용 혹은 노동의욕 증진 효과는 분명히 있었음
 - 2차년도 분석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식별됨
 - 그런데 1년 동안 6일의 고용일 차이가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합의된 정답은 존재하지 않음
 - 즉 이것이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인지는 각자가 처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음
 - 고용 혹은 노동의욕 증진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매우 작다는 일각의 평가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실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임
 - 최한수(2020. 6. 16)는 “실험설계 당시 핀란드 정부는 월 76만원 (560유로)의 실업수당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실업자의 취업 후 추가소득(한계소득)은 100% 늘어난다고 계산”했으며,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노동공급탄력성 0.2~0.5로 잡으면 노동공급이 최소 20%~50% 늘어야” 하는데, “현실은 1차년도 0%, 2차년도 8% 수준에” 그쳤으므로 “고용률 제고에 있어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2019년 4월 4일에 발표된 예비 결과에 대한 추가 발표에 따르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실험집단이 지급받은 기본소득과 다양한 복지급여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참가세율이 100%가 아니라 약 12~23%p 감소시킬 뿐이었음(이건민, 2019)
 - 노동공급탄력성이 0.2~0.5이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참가세율 차이가 약 12~23%p 이므로 이론적으로 노동공급은 2.4~1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차년도에서 양 집단 간 약 8%의 차이는 이론적 예상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임
- 2018년 1월 도입된 활성화 모델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평가는 지나치거나 그릇된 것임
- 최한수(2020. 6. 16)는 “정책 도입 이후 구직활동자로 등록된 개인의 구직노력을 강제하기 위한 의무와 제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기본소득 수급자 역시 약 절반 정도도 정책의 도입 후 육아보조나 고용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 구직활동자로 등록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처럼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고용활성화 정책은 실업급여와 기본소득 수급 집단 모두에게 유사한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활성화 모델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었느냐 (전혀) 안 주었느냐의 문제와 양 집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는 엄연히 다른 문제임
 - 통제집단의 약 2/3가, 실험집단의 절반이 약간 못 되는 비율이 활성화 모델에 적용을 받았다는 Van Parijs(2020. 5. 7)의 논의에 따른다면, 활성화 모델이 고용 또는 노동의욕 증진에 미친 효과는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더 컸으리라 예상되므로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는 6일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즉 ‘1년 동안 6일의 고용일 차이’는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말할 수 있음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도입될 경우 발현하리라 예상되는 ‘기본소득의 승수효과’가 작동되지 않았고, 만약 ‘기본소득의 승수효과’가 작동했다면 고용일의 차이는 더 컸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도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볼 수 있음
- 기본소득의 기대효과는 노동의욕 증진이지 실제적인 고용 증가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지만, 실험의 설계와 환경으로 인하여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노동의욕 증진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곤란한 지점이 존재함
- 정원호(2020. 5. 12)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관련된 쟁점은 ‘노동 의욕’이지 그 결과인 고용 현황이 아니다. 즉, 조건 없이 돈을 주면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지, 실제로 고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기본소득과 무관하다. 실제 고용은 노동공급과 노동

수요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 의욕이 있더라도 해당 업종과 직종에서 노동 수요가 없으면, 고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험집단의 고용이 비교집단보다 많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노동 의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이나 직업훈련 등의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위의 지적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만약 Randomization이 제대로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양 집단에서 개인의 능력(노동공급과 관련된 요인)과 제공될 수 있는 잠재적 일자리(노동수요와 관련된 요인)의 수준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때, 고용일수의 차이는 일정 정도 노동유인의 차이를 반영한다고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음
- 다만 “노동 의욕이 있더라도” “노동수요가 없으면, 고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 집단에서의 노동유인의 차이는 고용일수의 차이보다 더 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음
- 노동 의욕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이나 직업훈련 등의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는 있지만, 2018년 1월 도입된 “활성화 모델”은 이의 해석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음
- 물론 “실험대상이 전체 국민 중에서 임의추출된 것이 아니라 실업자라는 특수집단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노동공급 효과에 관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함(정원호, 2020. 5. 12)

- 기본소득의 고용 또는 노동의욕 증진 효과는 기본소득의 중요한 기대 효과 중 하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다른 효과들과 목표들에 비해 배타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님
 - 고용 효과는 핀란드 정부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식별하고자 한 핵심 효과였음
 - “배제된 사람들이 공식노동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소득 개혁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결코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의 훨씬 더 넓은 목표는 최소수혜자들의 경제적 보장과 선택의 자유를 증가시킴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더욱 회복력 있게 하고 사회를 더 정당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Van Parijs(2020. 5. 7)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

□ 기본소득의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태도 효과 등에 관한 해석

-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태도 효과는 명확히 나타남
 - 대부분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식별됨

- 그런데 이러한 차이(1. ‘스스로 인지한 우울증’에서, 기본소득 수령인은 22%가 ‘있다’, 76%가 ‘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통제집단은 32%가 ‘있다’, 65%가 ‘없다’라고 응답함, 2. ‘현재의 가구소득에 대해 스스로 인지한 재정상태’에서, 기본소득 수령인은 ‘편안하게 삶’ 또는 ‘괜찮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는 52%였음, 3. 0~10점 척도로 조사된 ‘삶의 만족도’ 기본소득 수령인은 평균이 7.3인 반면, 통제집단은 평균이 6.8이었음 등등)가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합의된 정답은 존재하지 않음
- 즉 이것이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인지는 각자가 처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음
-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 낮은 응답률, 선택편의의 가능성, 주관적 측정이 갖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관된 분석결과들은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태도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실험집단의 웰빙 효과는 비교집단에 비해 확연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기본소득이 행복 증진에 유용하다는 직접적 근거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물론 필자는 원리적으로 이 명제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이 실험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사전 조사가 결여되어 있어서 각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를 파악할 수가 없다. 만약 실험집단이 원래부터 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실험 결과가 행복 증진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음(정원호, 2020. 5. 12)
 - 사전조사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지만, 사회보건부가 2018년 6월이 되어야야 평가 팀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Kela를 임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애초에 불가능하였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우리가 만약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Randomization이 잘 되었다고 가정한다면(see Kangas, Jauhiainen, Simanainen and Ylikännö, 2019: Tables 3, 4), 낮은 응답률, 선택편의의 가능성, 주관적 측정이 갖는 문제점 등의 추가적인 문제로 인하여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태도 관련 성과변수에서의 차이의 크기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힘들어도, 일관된 분석결과들은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태도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이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정치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등을 제고할 잠재력을 시사하며, 이를 고려할 때 기본소득 및 기본소득 복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확대가능성은 유망할 것으로 평가됨

- 신뢰는 특정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대가능성, 개혁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신뢰와 복지국가(사회보장제도)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
-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는 그렇지 않은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해당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신뢰 수준이 높음으로써, 신뢰와 제도(정책, 정부) 간 선순환구조를 이룸
- 예비 결과에 대한 추가 발표를 보면, 0~10점 척도에서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0.5만큼 높고(6.8 대 6.3), 정치 신뢰에서도 0.5만큼 높은(4.5 대 4.0) 것으로 나타남
- 만약 기본소득이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정치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등을 높일 수 있다면, 기본소득 및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확대가능성은 유망할 것으로 보임

4.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유용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기본소득 실험을하기로 결정할 경우, 시작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각기 다른 행정부서에 걸친 모든 주요 주체의 승인을 확보하는 것, 설계와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 등을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정책적, 정치적 관심이 시작되며,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것을 그들의 이점이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 실험기간 동안에 불간섭주의(hands-off) 접근법,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서 기다리자는(wait-and-see-what-happens) 접근법이 채택됨으로써,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급락을 막지 못하였고 결국 정부가 더욱 손쉽게 활성화 모델을 도입할 수 있게 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고, ‘포화장소’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수효과와 공동체효과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뚜렷함
 - 사회실험은 특정 정책이 현실에서 도입되었을 때의 효과를 최대한 정확히 측정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함
 - 따라서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에도, 실제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의 상황과 가급적 유사한 형태로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이 관건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 실업자만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고, 1970년대 캐나다 민컴 실험에서 도핀이라는 ‘포화장소’를 도입한 것과는 달리 ‘포화장소’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수효과(거시경제효과, 일반균형효과)와 공동체효과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뚜렷함

- 기본소득 실험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회의 창구(window of opportunity)를 열어줄 수 있다는 기대는 지나친 낙관일 수 있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핀란드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목표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됨(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실험의 결정, 실험의 특정한 설계, 실험 도중에 벌어진 정책 변화 등 핀란드의 사례는 마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공백상태(policy vacuum)’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실험 결과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정책의 유용성과 향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매우 나이브하다는 것을 잘 보여줌(De Wispelaere, Halmetoja and Pulkka, 2019)
 - 예를 들어, 애초에 유하 시필래 정부에서 활성화 정책의 새로운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에 주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기본소득 실험 도중에 이미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과 같은 조건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기본소득 실험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라 매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2018년 1월에 엄격한 형태의 활성화 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은 전혀 이상하거나 뜬금없는 일이 아니라 할 것임
 - 오히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기본소득의 현실적 도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험과 혁신의 국가”라는 이미지 획득 및 강화에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7. 12. 18)

- 첫째, 특정한 기본소득 실험은 특정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과 밀접히 관련됨
- 둘째, 특정한 기본소득 실험은 이러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는 주체들의 이데올로기적·사상적 성향 및 현실적 관심과 긴밀히 연관됨
- 셋째, 완벽한 ‘폐쇄체계’ 내지 ‘실험실’ 상황의 설정이라는 면에서 사회실험은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에 비해 제약요소와 불리한 점이 많음
 - 사회는 그 자체로 수많은 인과기제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개방체계’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행위와 실천, 개입 등으로 인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른 ‘기제들의 작동을 억제’하는 ‘실험적 통제’를 현실적으로 완벽히 조성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

□ 기본소득 실험의 근본적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관련하여, Kate McFarland(2018. 2. 4)는 핀란드 실험을 비롯하여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가진 다섯 가지 한계들을 지적한 바 있음
 - 즉 ①기간상의 제한이 있다는 것, ②인구의 일부 하위집단에 국한된다는 것, ③순기여자들(고소득층)을 배제한다는 것, ④저소득 인구집단들로 제한된다는 것, ⑤실험 참가자들은 이미 노동윤리, 노동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익숙한 “성년이 되었다”는 것
 - 여기서 첫 번째 한계는 사회실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임
 - 물론 기간을 최대한 길게 늘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Guy Standing(2017)의 지적처럼 이는 기본소득의 현실적 도입을 지체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계는 이론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실험을 수행하려는 동기가 주로 기본소득이 저소득층, 실업자층 등의 행동과 태도 변화에 유용한 것을 보고자 한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사회실험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열악해지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회실험의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예산상의 제약이나 위에서 제시한 현실적인 여러 제약을 모두 극복한 상황을 가정해본다고 하더라도, 즉 기본소득 실험이 ‘매우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소득 실험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존재함

-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의 현실적 도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 가치관과 신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형성할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없음
-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이 기업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 기업 형태(자본주의적 기업, 노동자 소유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없음
-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이 민주주의의 심화·발전과 생태적 전환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없음
-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의 현실적 도입이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나 소유 형태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지 등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 없음

□ 기본소득 실험의 유용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사고하는 것이 중요함(정원호, 2020. 5. 12)

-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일거에 도입되기는 힘들 것이며, 따라서 그 효과를 미리 점검해보기 위해, 나아가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그에 대한 사회적 실험은 유용한 측면이 있”음(정원호, 2020, 5. 12)
- 아울러 정원호(2020, 5. 12)는 “실험을 한 나라에서 실험 후에 기본소득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 곳은 없고, (핀란드도 정권 교체 후에 기본소득 도입 계획은 없다) 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사전에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사회 실험 자체가 제도 도입의 “충분조건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실제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몬드(Hammond) 알래스카 주지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책 결정권자의 강력한 정책 의지였다고 평가”됨(정원호, 2020, 5. 12)
- 기본소득 “그 자체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으로서, 또 개인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공유자산(토지, 환경 등)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서 모두가 갖는 천부적 권리”(정원호, 2020, 5. 12)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류증희(2020).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인가 성공인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이견민 연구원에게 듣는다”. 『월간 시대』 79. pp.16~28. [발행일: 6월 1일]
- 미디어 데모스(2020. 5. 26).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실패인가 성공인가? [안효상의 커넥티드] 21회. 기본소득연구자 이견민 연구원에게 듣는다”. 미디어 데모스. <https://www.youtube.com/watch?v=rft9ARloNDw>
- 유종성(2019. 2. 25).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웰빙 효과, 고용 효과 나타났다 - [기고] 기본소득제 도입, 우리도 핀란드식 실험정치를!”. <<프레시안>>. [2020년 5월 15일 최종접속]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0160?no=230160>
- 이견민(2019). “과학이 사회보장개혁을 만나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하는 세미나의 발표문들”. 『월간 시대』 68. pp.43~51.
<https://alternative.house/finnish-basic-income-experiment2019>
<https://alternative.house/wp-content/uploads/2019/10/68-the-Times-Finland-Basic-Income-Experiment-Gunmim-Yi.pdf>
- 정원호(2020. 5. 1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라고? - [기고] 핀란드의 실험 방법이 가진 한계,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들”. <<프레시안>>. [2020년 5월 15일 최종접속]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214133666288>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17. 12. 18). “이러타 76회-2부. 기본소득의 최근 동향, 실험, 시사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20년 5월 15일 최종접속] available at <http://www.podbbang.com/ch/10912>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2020. 6. 18). “이러타 174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전모를 밝힌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20년 5월 15일 최종접속] available at <http://www.podbbang.com/ch/10912>
- 최한수(2020. 6. 16).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POST_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토론회 발표문. [일시: 2020. 6. 16. 1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과학이 사회보장개혁을 만나다” 세미나 발표문들의 슬라이드 자료(2019. 4. 4). https://www.slideshare.net/tag/perustulokokeilu?utm_source=uutiskirje&utm_medium=email&utm_campaign=Experimental+stdudy+on+a+basic+income+2018
- De Wispelaere, Jurgen, Antti Halmetoja and Ville-Veikko Pulkka (2019).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A Primer”.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Palgrave Macmillan, pp.389~406.
- Finlex 2016/1528. (2016). *Laki perustulokokeilusta* [Act on the Basic Income Experiment].
- Forget, Evelyn L. (2011). “The Town with No Poverty: The Health Effects of a Canadian Guaranteed Annual Income Field Experiment”. *Canadian Public Policy* 37(3). pp.283~305.
- Forget, Evelyn L. (2013). “New Questions, New Data, Old Interventions: The Health Effects of a Guaranteed Annual Income”. *Preventive Medicine* 57(6). pp.925~928.
- Halmetoja, Antti, Jurgen De Wispelaere and Johanna Perkiö (2018). “A Policy Comet in Moominland? Basic Income in the Finnish Welfare State”. *Social Policy and Society* 18(2). pp.319~330.

- Ikkala, Markku (2012). "Finland: Institutional Resistance of the Welfare State against a Basic Income". In: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n the Viability of Income Guarantee*, New York: Palgrave, pp.63~81.
- Kallioma-Puha, Laura, Anna-Kaisa Tuovinen and Olli Kangas (2016). "The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Journal of Social Security Law* 23(2). pp.75~88.
- Kangas, Olli, Signe Jauhiainen, Miska Simanainen and Minna Ylikännö (Eds.) (2019).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Preliminary Results". Reports and Memorandums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9:9. Helsinki: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http://julkaisut.valtioneuvosto.fi/handle/10024/161361>
http://julkaisut.valtioneuvosto.fi/bitstream/handle/10024/161361/Report_The%20Basic%20Income%20Experiment%2020172018%20in%20Finland.pdf?sequence=1&isAllowed=y
- Kangas, Olli and Ville-Veikko Pulkka (2016). *From Idea to Experiment. Report on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Helsinki: Prime Minister's Office.
- Kangas, Olli, Miska Simanainen and Pertti Honkanen (2017). "Basic Income in the Finnish Context". *Intereconomics* 52(2). pp.87~91.
- Kela (2017). "Who Can Get a Basic Income?". Kela.
- Kela (2018). *Unemployment Benefit Expenditure Decreased 10% in 2017*. Kela Statistics. [In Finnish].
- Kela (2020. 5. 6). "Results of Finland's Basic Income Experiment: Small Employment Effects, Better Perceived Economic Security and Mental Wellbeing". Kela. [2020년 8월 24일 최종접속]
https://www.kela.fi/web/en/news-archive/-/asset_publisher/IN08GY2nIrrZo/content/results-of-the-basic-income-experiment-small-employment-effects-better-perceived-economic-security-and-mental-wellbeing?utm_source=uutiskirje&utm_medium=email&utm_campaign=Experiment+al+stdudy+on+a+basic+income+2018
- Koistinen, Pertti and Johanna Perkiö (2014). "Good and Bad Times of Social Innovations: The Case of Universal Basic Income in Finland". *Basic Income Studies* 9(1). pp.25~57.
- McFarland, Kate (2018. 2. 4). "UBI's Impact on Work Culture: Not a Question for the Experimenters". *Basic Income News*.
<http://basicincome.org/news/2018/02/ubis-impact-work-culture-not-question-experimenters>
- Perkiö, Johanna (2020). "From Rights to Activation: The Evolution of the Idea of Basic Income in the Finnish Political Debate, 1980-2016". *Journal of Social Policy* 49(1). pp.103~124.
- Ploug, Niels (1999). "Cuts in and Reform of the Nordic Cash Benefit Systems". In: *Nordic Social Policy: Changing Welfare States*, Routledge, pp.79~103.
- Sipilä, Juha P. (2012). *Vaihtoehto [An Alternative]*. Helsinki: Centre Party. [In Finnish]
- Standing, Guy (2017).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London: Pelican Books.

Statistics Finland (2018). Growth in Employment Continued.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https://www.stat.fi/til/tyti/2018/06/tyti_2018_06_2018-07-24_tie_001_en.html
[2020년 8월 24일 최종접속]

Stirton, Lindsay, Jurgen De Wispelaere, Johanna Perkiö and Joe Chrisp (2017. 9. 25-27). *Modelling Political Parties' Support for Basic Income in Finland, 1979-2016*. Paper presented at 17th BIEN Congress, Lisbon.

Van Parijs, Philippe (2020. 5. 7). "Basic Income: Finland's Final Verdict". *Social Europe*. [2020년 5월 15일 최종접속]
<https://www.socialeurope.eu/basic-income-positive-results-from-finland>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민 (2020).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이해하기: 배경, 설계, 결과, 평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Alternative Issue Paper*, No. 20. (9월)
<https://alternative.house/alternative-issue-paper-no20/>